

北方經濟의 現況과 課題

李 浩

〈國土統一院調查研究室 第3研究官〉

1. 서 언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방외교정책과 함께 대공산권 경제교류와 협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일면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 속에 일말의 불안감을 느끼게 될 정도로 기업들의 경쟁 또한 치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 듯하다. 특히 지난 1월 23일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북한방문이 실현되고 금강산 공동개발을 비롯한 몇가지 합작투자 사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그 열기는 과열되는 추세에 있으며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대공산권 진출 러시에 대해 보다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국민 일각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우려는 첫째, 정부가 추진하는 북방외교정책은 자칫 잘못될 경우 그것이 소련의 전략에 이용당할 소지가 있으므로 너무 성급하게 추진될 것이 아니라는 견해이다. 이러한 우려는 특히 북한의 대남전략노선의 불변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안보의식에 혼란을 야기시킴으로써 사회혼란을 가중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에서도 공산제국의 시장규모가 미·일 등 서방제국에 비해 생각보다 크지 않고 경제체제의 상이로 인한 제약요인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미 소련이나 중국·북한 등에 진출하였던 서방기업들의 실패 경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 북방외교정책에 따른 대공산권 경제교류·협력문제를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것은 의의있고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다.

2. 북방외교정책의 추진배경

한반도 통일문제는 분단의 역사적 배경으로 보나 흔히 거론되는 지정학적 특수성으로 보나 주변 강대국의 협력 없이는 이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민족의 주체성을 경시한 외세 의존적 통일 접근노력은 단호히 배제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주변 강대국의 역할과 영향력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태도 역시 현실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통일을 민족 내부의 문제로 보고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당사자간의 대화와 함께 통일의 외적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해 나가는 노력이 동시에 추구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1973년 6·23외교선언은 바로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천명된 정책이며 할슈타인 원칙을 벗어난 우리의 북방외교정책은 사실상 이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북방외교정책은 사회주의 제국의 내부 변화 추세와도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1960년대 중반부터 동구제국에서 일기 시작한 경제개혁 움직임은 1979년 등소평 집권 이후

중국이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하고 4대현대화를 위한 개방화가 추진됨으로써 일반화되었다. 특히 1985년 고르바초프 정권이 출범한 이후 추진된 소련의 개방과 개혁정책은 국제 정세에 있어서 동·서 긴장완화의 움직임을 가속화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중·소의 이러한 변화와 미·소간 INF 협정 체결 등 군사적 긴장완화의 분위기는 북방외교정책에 매우 고무적인 여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그러나 국방력이나 외교의 힘은 기본적으로 경제력의 바탕 위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한국은 70년대 이후 지속적인 경제의 고도성장에 힘입어 국민소득 및 무역량의 획기적 증대, 국제수지 흑자 등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높아졌으며 특히 88 서울올림픽의 개최를 계기로 역사와 문화 등 민족의 저력이 세계에 널리 알려지게 됨으로써 북방외교정책의 여건은 크게 호전되었다.

따라서 최근 1~2년 사이에 중국·소련·동구 등 공산권 국가들은 한국과의 비정치적 교류분야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1987년도에는 이들 국가와의 인적교류는 전년도에 비해 80%, 물적교류는 약 7%씩 각각 증대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시기부터 급격히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심도 역시 깊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정경분리를 원칙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비정치적 교류·협력이 확대·심화될 경우 정치적 관계개선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2월 헝가리와 외교관계 수립은 바로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북방외교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로 이해될 수 있으며 멀지 않아 동구의 일부 국가들도 헝가리의 뒤를 따를 것이 기대되기도 한다.

3.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동향

전술한 바와 같이 올림픽을 계기로 중·소 등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비정치적 교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급속히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서방 선진국들의 대한(對韓) 수입규제 및 경제

개방의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서 기업들의 북방 진출 노력 또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국가에 대한 경제정보는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실정에 있어서 북방진출을 꾀하는 기업활동에 큰 제약 요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총량면에서 파악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규모는 자료원천에 따라서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대략 <表-1>과 같다.

<表-1>에 의하면 중국·북한·베트남을 제외하면 1인당 GNP를 기준으로 할 때 대부분의 동구제국은 한국보다 소득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구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소련·베트남을 제외한 국가들은 한국보다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사회주의 국가들의 가장 큰 경제문제는 지속적인 경제침체로 지적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제개방을 통해 현대화 작업을 가장 심도있게 추진하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면 대부분 3% 이하의 저조한 성장을 나타내고 있거나 부(負)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지적될 수 있다.

사회주의 제국의 경제규모 (1987년)

<表-1>

구분	인구 (만명)	GNP (10억불)	1인당 GNP (불)	경제 성장률 (%)
소련	28,255	2,230.0	7,890	0.5
중국	107,877	380.2	352	9.4
유고슬라비아	2,340	145.0	6,197	-0.7
불가리아	906	57.8	6,380	0.7
체코슬로바키아	1,570	140.5	8,949	1.3
동독	1,661	175.0	10,536	2.2
헝가리	1,062	81.0	7,626	1.2
폴란드	3,778	254.1	6,726	-2.5
루마니아	2,367	128.3	5,420	3.1
베트남	6,153	19.4	315	-
북한 ²⁾	2,040	19.2	936	3.3

資料 : 「The Military Balance 1987-88」.

註 : 1) 경제성장률은 US. CIA 「Hand 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8」에서 인용.

2)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비교 1988」에서 인용.

사회주의 제국의 무역현황(1986년)

〈表-2〉 (단위: 백만불)

구분	수출	수입
소련	97,053	88,874
중국	34,600	37,355
유고	NA	NA
불가리아	14,518	15,577
체코	21,391	22,066
동독	27,831	27,496
헝가리	16,179	16,472
폴란드	23,362	22,311
루마니아	12,052	10,600
북한 ¹⁾	1,670	2,390

資料: US. CIA 「Hand Book of Economic Statistics 1988」 및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 현황비교 1988」.

註: 1) 1987년 실적임.

수출입 무역규모를 보면 1986년의 경우 소련은 수출입 총액이 약 1,859.3억불(수출 970.5억불, 수입 888.7억불) 정도이며 81.8억불의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 중국은 수출입 총액이 약 719.6억불(수출 346억불, 수입 373.6억불)로 27.6억불의 적자를 시현하고 있다. 각국별 수출입 현황은 〈表-2〉와 같으며 소련·동독·루마니아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한편 소련을 제외한 대부분의 동구국가들은 채무국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이들 국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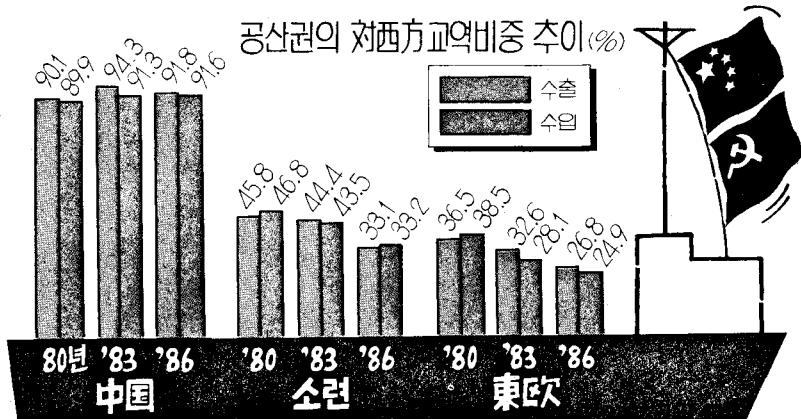
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한 결과 초래된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60년대 중반 이후부터 부분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함으로써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리를 도입하는 한편, 서방 제국과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자본과 기술 도입에 관심을 갖게 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들 국가들의 외자도입 및 합작기업법의 제정시기와 주요 내용들을 요약해 보면 유고는 1967년에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외자법을 제정하였는데 동법에 의하면 합작기업의 소유 형태는 사회적 소유로 되며, 그 형태는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인, 연합노동조직의 형태이다. 외자의 참가비율은 10% 이상 50% 미만이며 무역·보험·공익사업을 제외한 전문야가 합작대상으로 되어 있다.

헝가리는 1970년에 관계법이 제정되었으며 소유권은 국내법상의 소유권에 준하고, 기업 형태는 합명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이 있다. 외자의 참가비율은 원칙적으로 49% 이하로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50% 이상도 허가될 수 있다. 합작분야는 제조업, 상업, 금융업 등으로 되어 있다.

루마니아는 1971년에 관계법이 제정되었다. 소유권의 형태는 역시 국내법상의 소유권 범위에 한하며 기업 형태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형태다. 외자 참가비율은 49% 이하로 되어 있고 합작대상 분야는 공업, 농업, 건설, 관광, 운수, 과학기술 연구 등 전문야로 되어 있다.

폴란드는 1976년에 관계법이 제정되었는데



합작기업의 형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개인소유 등 다양하며, 외자의 참가비율은 소규모 사업에 있어서는 100%까지 가능하나, 일반산업부문은 49% 이하로 되어 있다.

베트남은 1977년부터 관계법이 준비되었고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형태로 되어 있다. 외자의 참가비율은 30% 이상 49% 이하이나 특정부문에서는 100%도 가능하다.

중국은 1978년에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 제정되었고, 합작기업의 형태는 유한회사 형태이다. 외자의 참가비율은 25% 이상이며, 사업분야는 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소련은 사회주의 국가들 중 가장 늦은 1987년에 합영법을 제정하였다. 합작기업의 형태는 합작기업, 국제생산연맹, 합작기관 등으로 나누어지며 소련 국내법상의 법인체로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소련의 합영법에는 외자의 참여비율에 대한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 특징이며, 합작분야에 대해서는 공업, 과학, 농업, 건설, 무역, 수송 및 기타부문 등에서의 생산과 산업, 과학기술 발전 활동을 위하여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합영법은 1984년 9월에 제정되었고 유한책임회사의 형태로 되어 있다. 외자참여비율은 합영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합영분야는 공업, 건설, 수송, 과학기술, 관광 등 모든 경제분야로

되어 있다.

1985년 현재 사회주의 제국의 국별 외채규모는 <表-3>과 같다.

4. 경제교류·협력 현황과 전망

최근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대(對)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간접교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까닭에 각국별 교역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란 대단히 어려운 실정이다.

중국과의 교역은 1980년부터 1987년까지 8년간 총 56.1억불의 수출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 중 수출은 28.6억불, 수입은 27.5억불로 약 1억불 정도의 흑자를 나타내었다. 주요한 교역품목은 섬유류와 컬러TV 등 가전제품, 철강재 등 공산품이 수출되고 옥수수, 생사류, 석탄, 원면 등 원료제품이 수입되었다. 합작투자 사업으로는 중국에 냉장고 조립공장(대우), 봉제장난감공장(조선무역) 등이 현재 가동중이고 올림픽 이후 양국간 경제협력 사업은 급속히 확대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987년 중 수출입 실적은 수출이 8억1,320만불, 수입 6억7,340만불을 기록하여 한국이 흑자를 나타내고 있다.

소련과의 교역은 1986년에는 수출 6,400만불, 수입 7,600만불 등 총 1억4,000만불이었으나 1987년에는 수출 6,700만불, 수입 1억3,000만불로 총 2억불 수준으로 증가되었다. 주요 수출입상품은 섬유류와 전자제품이 수출되고 원목, 유연탄, 모피, 고철, 냉동명태 등이 수입되었는데 對蘇 교역에 있어서는 한국이 무역적자를 나타내고 있는 점이 대중국 교역과 다른 점이라 하겠다.

합작사업으로는 모피공장, 의류공장, 섬유공장 등이 가동중이거나 추진중에 있고, 가장 큰 관심 사항은 시베리아 및 원동지구개발의 참여 문제이다.

이미 금년 2월 1일부터 국교가 수립된 헝가리와는 1986년에 수출 550만불, 수입 130만불 등 총 680만불의 교역규모를 기록하였고, 1987년에는 수출 1,500만불, 수입 300만불등

사회주의 제국의 외채현황(1985년)

<表-3>

국 별	외 채 규 모 (만불)
헝 가 리	1,013,780
폴 란 드	2,580,000
루 마 니 아	609,000
체코슬로바키아	280,000
불 가 리 아	167,000
동 독	1,200,000
유고슬라비아	991,220
북 한(1987년)	521,000

資料 :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 1988년 9호.

총 1,800만불로 교역규모가 큰 것은 아니나 급격히 증대되고 있다. 주요 교역품목은 의류와 가전제품, 주석판 등이 수출되고 화공약품, 농산물 및 타자기 등이 수입되었다.

헝가리와의 경제협력사업은 컬러TV 조립공장, 합작투자은행, 전자레이저공장, 호텔업 등에서 진출을 추진중에 있으며, 1987년 중에는 컨테이너, 도장설비, 플랜트 등도 수출된 것이 특징이다.

유고와는 1986년에 수출 690만불, 수입 100만불 등 교역총액은 790만불에 불과하였으나 1987년에는 2,000만불로 역시 급속한 증대를 나타내었다. 주요 수출입 품목은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 등이 수출되고 전자부품, 화공약품, 의약품 등이 수입되고 있다.

폴란드와는 1986년에 수출 1,200만불, 수입 400만불 등 총 1,600만불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1987년에는 수출 2,100만불, 수입 200만불 등 총 2,300만불로 교역규모가 증대되었다. 수출 상품은 합성섬유 원단, 전자제품, 운동용품 등이며 화공약품, 화학원료, 밀 등이 수입되었다.

소련과 함께 사회주의 국가 중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동독과의 교역현황은 1986년에 수출 900만불, 수입 800만불 등 총 1,700만불을 기록하였고 1987년에는 수출입 총액이 4,200만불로 역시 급속한 증대를 나타내었다. 가전제품과 섬유제품이 수출되고 공작기계, 광학기계, 전자제품 등 기술수준이 높은 제품들이 수입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교역은 규모면에서 보아 역시 중국과 소련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교역대상국임을 알 수 있으며 시장규모나 자원부존, 지리적 근접성 등에서도 앞으로 우리의 교역 대상국으로서 더욱 중요한 위치로 부상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사회주의제국과의 경제교류와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아직도 많은 제약요인이 잠재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주의 국가들이 국제수지

적자를 나타내고 있어서 외화의 부족이 만성적인 상태에 있다. 뿐만 아니라 무역의 형태가 구상무역을 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와의 교역 증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둘째, 경제개혁과 개방화가 진전되어 시장경제원리가 부분적으로 도입되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도 경제운영에 있어서는 뿌리깊은 관료주의의 폐해가 불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합작사업 등 경제적 진출에는 상당한 준비기간이 필요하고 개별경제단위에서의 필요에도 불구하고 국민경제 전체적 차원에서의 판단에 따라 이미 결정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갑작스럽게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셋째, 중국이나, 소련 시베리아의 진출 등에는 사회간접자본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분야에서의 합작은 이들 하부구조의 건설상황과 보조를 맞추어야 하므로 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사회주의 제국과의 경제교류나 협력에 있어서는 아직도 군사적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금지되고 있는 분야가 엄연히 존재하며 특히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Cocom list에 의한 수출규제 품목이나 기술협력이 제한된 부문은 대서방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할 문제인데 이러한 부문 역시 하나의 제약요소가 될 것이다.

종합적으로 볼 때 북방외교정책에 따른 대공산권 경제교류·협력의 추진은 장기적인 면에서는 시장규모도 크고 협력분야도 광범위하며 수출시장 및 원자재 수입선의 다변화에 대한 정책적 필요성은 물론, 그것이 갖는 통일정책적 의 등으로 분명 바람직하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단기적인 면에서 볼 때는 만만치 않은 각종 제약요소들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북방진출에 있어서는 기업 상호간이나 정부와 기업간의 긴밀한 협조유지가 필요하며 편협한 기업경쟁의 차원이나 기업이윤만을 앞세운 성급한 태도는 기업 스스로에게도 실익이 없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반드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